

프랑스 사회당의 선거강령

지난 호에 이어 각국 진보정당의 선거강령을 참고자료로 수록한다.
 이번에 실릴 자료는 1995년 프랑스 대통령선거에서 사회당의 후보로 나섰던 리오넬조스팽의 선거강령이다.
 당시 사회당은 비교적 온건한 중도좌파의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결국 선거에서 패배했고
 1997년 총선에서는 훨씬 원치적이고 급진적인 강령으로 복귀하면서 오히려 승리를 안게 되었다.

리오넬 조스팽 선거운동본부(1995년)

번역 : 편집부

I. 인간을 경제의 중심에 세우자

우리는 재정적자, 외환, 프랑화(貨), 기업 경쟁력의 불안을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현행 경제정책에서 가능한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경험에서 배워야 한다.

1. 노동에 참된 가치를 돌려주자

- 임금과 이윤의 균형을 이루는 것은 경제와 사회를 위한 필요하고 시급한 과제이다.
- 우리는 정부가 국가수입을 봉급생활자(wage-earner)를 위해 더 많이 사용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 우리는 사용자의 책임을 분명히 한다.
- 정부는 시민들과 사회단체에 국가수입과 기타 수입의 분배에 관해 완전하고 믿을만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2. 일자리를 창출하라

우리는 중요한 세가지 프로그램을 시작할 것이다.
 주택지구를 재건축하고 공공주택을 개발한다

국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개발한다

- 이러한 서비스를 발전시키기 위해 지방정부와 여러 단체를 동원한다.
- 국가재정을 상호보험회사, 공동생산위원회, 공공주택기구에 분배한다.
- 자연환경과 국가유산을 보존하고 환경을 개선한다: 농촌지역의 자연보호, 홍수방지, 토지보호, 다양성 보존, 자연공원유지, 국가유산 지정
- 이러한 계획에 주요 예산을 배정한다.
- '적극적인 재정지출'의 방향으로 실업보상기금을 재조정하고 국가지출을 고용창출에 집중한다.
- 고용과 관련된 예산지출을 체계적으로 점검한다.
- 중앙서비스와 공공서비스의 조정을 통해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보존한다.
-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기업을 동원한다.
- 국민들이 직업 전문화에 대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직업훈련에 관한 1971년법을 재검토한다.
-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하청노동자 의무헌장을 만든다.
- 중소기업의 신용도 향상을 지원한다.
- 기업설립 절차를 간소화한다.
- 공장 이전을 보다 쉽게 만든다.
-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산업발전과 고용발전을 건설하게 만든다.
- 농업부문에서 우리는 유럽식의 인구비율에 따른 가족농장 모델을 준수한다.
- 유럽 모델의 뼈대인 공동농업정책을 유지한다.
- 적용수당(application allowanaces) 정책을 최대한 강구한다.
-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춘 산업분산화 정책을 적극 추동한다.
- 지방정부 및 대학들과 연결된 지역기술센터와 지방개발위원회를 설립한다. 지방은행들은 중소기업에 대한 이자율 인하를 통해서 이러한 단체들을 후원한다.

3. 주당노동시간의 단축

- 인간은 자신의 시간을 자유롭게 조직할 수 있어야 한다. 노동시간의 길이(35시간이든 32시간이든)와 사용방법에 상관없이 주당노동시간은 다음세기에는 30시간 안팎이 될 것이다.
- 기업과 임금생활자, 그리고 국가가 재정을 제공하는 '시간자본' (time-capital)의 공생형태를 개발할 것이다.
- 우리는 1997년 법정노동시간을 주37시간으로 단축함으로써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운동을 전개한다.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2년동안(1995년부터 1997년까지) 관련 당사자들이 함께 토론하고 활동할 것이다.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고용증대를 위해 구체적인 정책을 협상할 것이다. 공공재정 인센티브와 규제조건을 정비할 것이다.
- 우리는 공공부문에서 노동시간 단축이 단체교섭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 가운데 하나라고 확신한다.

4.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의 약자를 보호하라

- 우리는 만인을 위한 평등한 사회보장과 효율적인 경제를 통합시킨 유럽모델을 강력하게 지지한다.
- 프랑스 국민들은 효율적인 연대가 국민들 사이에 공유된 연대를 뜻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만인을 위한 건강권을 보장하라

- 공공보건, 보건교육, 그리고 주요 질병(암, 에이즈) 연구를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보건제도를 정비한다.
- 의료구호기관을 재조직한다.
- 1차진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 종사자를 보건제도의 중심에 둔다.
- 매년 사용자와 노동조합은 질병수당의 적정사용과 유지를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하며 예산의 지출과 수입 총액을 관리해야 한다.
- 공공의료기관을 보호하고 경영자가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만든다.
- 보건지출 통제를 통해 사회빈곤층을 위한 의료보호와 보장조건을 개선한다.
- 연금을 보장한다.

분배제도

- 보험금과 연금 재평가를 통해 퇴직연금이 성장의 열매를 공유할 수 있도록 연금제도의 조건과 상태를 점검한다.
- 노인들을 위한 독립 주거시설 확보와 사회적 보호를 위해 복지수당 지급과 주택건설을 포함하여 노인들을 위한 완전한 연대 계획을 수립한다. - 은퇴자들이 사회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경험과 기술을 사회적으로 전파도록 할 것이며, 이를 통해 퇴직자들의 사회적 역할을 증진할 것이다.
- 청년층과 장기 실업자에게 특별한 관심을 둔다.
- 청년, 특히 미숙련 노동자와 장기 실업자의 일자리를 위해 공공서비스 부문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

- 다양한 자격증제도를 통합하고 이를 강력하게 발전시킨다.
- 젊은 부부와 저소득 가구를 위한 자녀수당의 증액을 통해 '두번째 기회를 위한 권리'를 돌려준다.

가족수당과 어린이를 위한 정책

- 저소득 가정의 첫 출산을 지원한다.
- 어린이 보호기관을 설립하고 지원한다.
- 이러한 정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고소득가구에 대한 가족수당제도를 변경한다.

장애자를 위한 사회정책

- 장애자들을 사회의 동등한 일원으로 통합하기 위해 현재 부족한 특별기구(장애자를 위한 서비스, 고용보호)를 만드는데 우선권을 부여하여 장애자들을 일상생활에 발전적으로 통합한다.
- 장애자 고용을 위한 자원을 정비하고 늘린다.

5. 공평한 세금

원칙: 더많은 정의와 효율성

- 국민보건기금을 위한 고소득자들의 부담금을 정비하여 소득 5천 프랑 이하 저소득층의 사회적 부담을 줄인다.
- 일반사회기부금(Generalized Social Contribution)을 모든 (Livert 예금을 제외한) 자본수익에 확대시켜 일반사회기부금을 활성화한다.
- 경제적·사회적 목적에 위배되는 여러 가지 특권과 혜택, 그리고 면제를 없애 소득세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든다.
- 중복부과되는 부담금을 줄여 프랑스 회사들이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의 회사들보다 세금을 적게 내도록 한다.
- 지방세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여 지방정부간의 원활한 자원배분을 촉진한다.
-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양도조건(transfer conditions)을 재정비한다.

6. 세계경제 질서 회복을 위한 노력

- 세계경제는 민주적이고 사회적인 목표에 부응하는 정치상황을 요구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을 강화한다.

- 단일 통화를 향한 길을 다시 천명한다.
- 유럽 교통통신망의 성장과 생태계 보전을 위해 국민발의권을 확대한다. 필요하다면, 오염 유발 에너지 사용자들에게 환경세(eco-tax)를 부과하여 국채 이자의 일부를 충당한다.
- 유럽인의 다양성은 유럽대륙의 재산이기 때문에 문화적이고 창조적인 산업을 장려한다.
- 우리는 일방 제재(unilateral sanctions)라는 무기를 통해 대서양과 아시아 선진국들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싸울 것이다.

공동발전법(Act for lasting joint development)

- 개발도상국의 무역발전을 인정하는 가운데 세계무역기구(WTO)와 국제노동기구(ILO)의 국제적인 규정을 존중한다.
- 우리는 최소한의 사회현장을 준수하지 않는 나라들의 수출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여 이것을 개발도상국의 보건, 교육 사회보장을 위해 사용할 것이다.
- G7 국가들의 모임을 공동발전을 위한 정상회의로 변화시켜 새로운 국제통화제도를 위한 협상을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
- 10년동안 안정적으로 투자하지 않고 빠져나가는 자본에 대한 세금부과를 제안한다.
- 이러한 세금부과를 토대로 공정한 국제통화제도 확립과 환율안정을 위한 범세계 차원의 강력한 통화기금을 창설할 것을 제안한다.

II. 21세기 프랑스를 위해 청년을 준비시키자

- 우리는 청년들과 함께 지성과 우애, 그리고 관용이 넘치는 새로운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

1. 청년이 사회변화를 주도해야 한다

고용을 위한 실천 프로그램

- 우리는 청년들이 빠른 시일 안에 고용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한다.
- 청년들이 세가지 주요한 고용 프로그램의 첫 번째 수혜자가 되게 하며 그들을 위한 네 번째 프로그램, 즉 인도주의적 실천을 준비한다.
- 청년들을 사회적 네트워크의 공고화와 재건설에 적극 동참시키고, 나아가 프랑스와

개발도상국에서의 인도주의 실천활동에 참가시킨다.

- 이를 위해 새로운 형태의 국가 서비스 기관을 만든다.
- 민간단체(NGO)들과 협력하여 청년들에게 해외자원봉사같은 제3세계를 위한 인도주의 실천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위 정책의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국방예산과 해외자원봉사예산을 정비한다.

청년들에게 노동을 장려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한다.
- 인턴제도의 엄격한 관리와 사용자와 노동조합간의 논의를 통해 청년층 장기실업자들에게 신속하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국가는 이를 위한 재정책임을 진다.

마약과의 전쟁

- 우리는 마약거래자와 전쟁을 수행할 것이다.
- 마약거래자와 공급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잡아낼 것이다.
- 우리는 특정 지역에 존재하는 '무정부' 상태를 제거할 것이다.
- 치안예방활동을 확대한다.
- 우리는 마약중독자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로 간주한다.
- 마약센터, 마약중독자피난처와 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늘리며 마약중독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 10-14살 청소년을 위한 특별조치가 필요하다.
- 1970년법을 개정해야 한다.

에이즈(AIDS)와의 전쟁

- 우리는 청년층의 에이즈 역제를 공공보건정책의 우선 과제로 상정한다.
- 예방활동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
- 에이즈관련 단체와 협동으로 예방활동에 착수해야 한다.
- 병원 의료진을 훈련시킨다.
- 자발적인 에이즈검사를 지원한다.
- 국가가 제약산업의 연구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 자동주사기의 보급을 확대한다.
- 1프랑짜리 콘돔을 프랑스 전역의 학교에서 판매해야 한다.

2. 학교에 우선권을 주자

- 공공교육에 비종교적·공화주의적 정신을 확립한다.

교육을 새로운 현실에 적응시키자

- 백과사전식 교육보다는 참고서식 교육을 시행한다.
- 학교제도를 재정비 한다.
- 초등교육은 읽기 쓰기 셈하기 방법을 가르치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학교 수업은 직장생활에 필요한 실천과 실험을 중시해야 한다.
- 프랑스 사회는 스무살에 장래의 사회계급이 결정되는 학벌에 기초한 사회에서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사회로 전환되어야 한다.
- 기업과 협력하여 학교와 대학에 직업훈련을 위한 기술전문과정을 설치한다.

사회적 불평등과의 전쟁

- 모든 형태의 교육지원금을 장려하고 발전시킨다.
- 학교를 위한 실질적인 사회적 연대망을 구축해야 한다.

자율성과 책임성을 발전시킨다

- 분권화된 학교운영과 재정관리를 위한 정책을 수립한다.
- 학교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자체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학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3. 지성을 위한 싸움에서 승리해야 한다

- 지성은 21세기의 도전이자 재산이다.

21세기 대학 건설

- 21세기 대학 건설을 위해 국가·지방정부·대학간의 협력관계를 재구축한다.
- 지속적인 직업훈련과 자격증제도를 통해 국민들이 다양한 형태로 고등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 학생들의 사회활동을 활성화한다.

연구활동에 대한 후원

- 국립과학연구소를 부활시키고 대학의 연구기관을 활성화한다.
- 민관합동의 국립기술산업연구소를 설립한다.
- 유럽과학재단 및 기타 국립기관과 협동으로 유럽 차원의 과학기술협력정책을 재가

동한다.

- 유럽연합 차원에서 중소기업 연구소와 중소기업의 연구프로젝트를 위한 재정을 지원한다.

4. 문화적 도전에 대응하라

- 모든 형태의 창작 문화활동을 꽃피우기 위한 조건을 창출한다.

만인을 위한 사회문화

- 문화예산을 국가예산의 최소 1%가 되도록 한다.
- 문화정책을 탈중앙화하며 지방정부간의 협력을 통한 문화발전을 추진한다.
- 젊은이들의 예술 재능을 개발하고 이를 위해 문화산업을 지원한다.

문화전쟁에서 승리하자

- 유럽차원의 교류정책을 통해 거대한 공동문화시장을 창출한다.
- 유럽차원의 문화기술 혁신을 위한 전략을 발전시킨다.
- 프랑스통신회사를 공공부문의 통제하에 둔다.
- 필요한 구조조정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생산할당제를 유지한다.
- 공영방송망을 포함한 주요 텔레비전 방송국간의 협력을 장려한다.
- 영화감독들이 현대기술을 통해 다양한 언어로 구성된 영화를 만들 수 있도록 유럽의 '할리우드' 건설을 고려한다.
- 방송언론집단과 공공기관과의 관계를 분명히 한다.
- 정보와 언론의 자유를 위해 중앙과 지방의 신문들을 위한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국가의 경제적 지원을 통해 일상적인 '정보의 대중화'를 도와야 한다.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방송언론 주식 보유를 통해 이 분야의 자본집중을 막는 법률을 제정한다.
- 방송법을 재검토한다.

5. 만인을 위한 스포츠가 되어야 한다.

- 학교 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해 5년 내에 주당 6시간의 체육시간을 확보한다.
- 폭력거부, 타인존중을 위해 윤리 교사의 역할을 증대시킨다.
- 자발적인 스포츠 활동을 조직하고 장려한다.
- 국민들이 스포츠를 전문적으로 즐길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한다.
- 스포츠경기장의 폭력사태를 막기 위한 법률을 제정한다.

- 체육수업과 스포츠 활동을 위한 예산을 대폭 증액한다.
- 스포츠정책을 분권화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체육단체들간에 견고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한다.

III. 생태를 통한 삶의 질 개선

1. 새로운 생태학적 개발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라

주변환경을 복원하라

- 구릉지를 개발하고 토지를 복원하며, 식목과 관개작업을 위한 광범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 '그린' (green) 산업을 발전시킨다.
- 이를 위해 국가조정기구를 만들고 재정마련을 위한 계획을 세운다.
- 민주적인 협의와 시민단체의 개입을 통해 지방정부 산하에 이 계획을 실현할 기구를 설치한다.

자연재해를 막고 오염과 싸운다

- 법적규제를 통해 자연재해와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도록 효과적인 정책을 세운다.
- 방음벽 설치에 공공재정과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소음공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 항공조사를 통한 정보수집활동을 강화한다.
- 대중교통을 발전시키고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교통수단을 개발한다.
- 이산화탄소 방출을 줄인다.
- 수질을 감시·감독한다.
- 공공서비스 단체가 식수의 처리와 검사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한다.

교통정책을 재정비해야 한다

- 대중교통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해 중앙정부와 유럽차원의 재정을 마련한다.
- 5년내에 대부분의 국영 교통수단을 전기자동차나 전철로 교체한다.
- 기술린의 납성분 양을 줄이고 가스이용을 장려한다.
- 화학원료를 사용하는 교통수단에 대해 보다 엄격한 규제를 시행한다. - 유럽사업프로그램의 틀 속에서 철도운송계획과 도로운송계획을 결합시켜 철도교통과 도로교통이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에너지정비법을 제안한다

- 의회는 프랑스 핵시설 평가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 독립적인 평가기관을 만든다.
- 외국의 화석연료, 재생에너지, 지열에너지 개발에 대해 연구한다.
- 향후 10년동안 우리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에너지정비법을 투표로 결정한다.

환경세를 신설한다

- 이산화탄소 방출과 관련해서 유럽 차원의 환경세를 제안한다.
- 소음공해와 수질오염에 관한 세금을 신설한다.

2. 지방발전을 위한 연대를 강화하라

- 민주적인 분권화를 추구한다.
-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고속철도, 전기통신망, 연구사업, 대학 같은 여러 가지 자원들을 제공한다.
- 중소도시가 치지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농촌지역에 공공서비스와 편의시설을 대규모로 마련한다.

어려움에 처한 농촌지역과 중소도시의 공공서비스를 지원한다

- 공공서비스를 유지하고 그것을 위한 장치를 마련한다.
- 공공서비스의 효율성을 개선한다.
- 지역사회 전체를 희생시키는 단기적인 경제정책을 중지한다.
- 필요한 곳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를 위한 재정적·법적 장치를 마련한다.

부유층과 빈곤층간의 연대를 발전시킨다

- 우리는 연대의 원칙을 인정하며 연대를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할 것이다.

평등한 국제발전을 추구한다

경제발전은 최우선 과제이다

- 보다 개선된 방향으로 지역을 통합시킨다.
- 경제발전은 국민의 지혜와 교육수준, 그리고 기술과학 잠재력, 유럽연합과의 협력에 근거한다.

- 무관세지역 설치와 부가가치세 강화를 통해 기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세법 개정을 고려한다.
- 전통경제, 특히 농업생산을 보호하기 위해 주의깊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다.
- 유통산업의 현대화를 장려한다.

평등은 두 번째 과제이다

- 학교제도를 개선하고 형편과 조건에 알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교육훈련의 중대를 통한 기회평등을 추구한다.
- 사회평등을 향한 진보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이것은 임금과 사회복지와 관련되어 있다. 이것은 공공주택정책을 실시하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새로운 사회계약을 요구하며, 특히 청년을 위한 사회적 통합과 저임금 생활자의 부담경감을 의미한다.
- 지방정부와 자치단체가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평등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형편과 조건에 따른 저마다의 특수성과 독자성을 인정한다.

3.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를 위한 정책을 재개발하라

모든 국민은 자기집을 가질 권리가 있다

- 2년안에 무주택자를 없애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주택단지 재건과 빈민층 주택건설을 계획한다.
- 객관적인 건설정책 수립을 통해서 공공주택 건설을 다시 지원하고 현행 주택제도를 재검토한다.
- 재개발·재건축지역의 강제철거를 피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모색하며, 실업자들을 위한 주택정책 마련에 우선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극단적인 경우, 주택감독관이 공공기금을 이용하여 투기목적으로 비어있는 주택을 징발해야 한다.
- 개인주택과 관련해서 우리는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임대인을 지원할 것이다.
- 집세를 저렴하게 보장하는 주택소유자에 대해서는 세금우대와 집값보장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 무권리자들에게 주택을 임차하는 주택소유자에게 보너스를 지급한다.
- 모든 지역사회에 공공주택을 건립한다.
- 지자체가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필요 경비를 면제한다.
- 시장 군수의 역할을 강화한다.
- 주택개선정책을 확대한다.

- 국민들이 자기집을 소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한다.

교외지역을 재건설하자

- 우리는 국민이 이용하는 공공서비스와 민간서비스를 강화하고 광범위한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전개하여 20개 혹은 30개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건설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 중앙정부는 필요한 재정지원과 강력하고 적극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방정부가 낙후지역을 사회경제적으로 복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민서비스의 발전

- 개인서비스를 위한 일자리(집보기, 아이돌보기)를 만드는 목적은 실업을 줄이려데 있다. 물론 이 부문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해당직업이 요구하는 소명감을 가져야 하며, 자기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국가자산을 통합하라

- 국토환경부(Ministry for Ecology and the Territories)를 신설할 것을 수상에게 요구한다. 국토환경부는 환경, 지역개발계획, 주택, 교통, 에너지와 관련된 자원을 통합시켜야 한다.
- 지금까지 공표되고 있지 않은 법률(1988년에서 1993년 사이에 투표로 통과된 주요 환경법 5개)을 신속하게 공표해야 한다.
- 쓰레기처리 문제와 관련해서 의사결정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IV. 프랑스와 세계를 위한 유럽을 원한다

1. 우리의 대외정책을 다시 점검하라

평화

- 프랑스가 평화의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
- 국제연합(UN)이 관리하는 위기관리, 평화유지 혹은 평화재확립, 인도주의적 개입을 위한 실질적인 중재제도를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 이를 위해 국제연합 핵심기관들의 효율성을 강화해야 한다.
- 우리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리고 아랍 국가들간의 평화를 중시한다.
- 유럽연합(EU)와 함께 중동지역에 공동번영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민주주의

- 세계 모든 나라가 인권과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 우리는 다시한번 민주주의를 강조함으로써 알제리의 정치 사태가 해결되도록 도와야 한다.

발전

- 우리는 구호활동이 새롭고 건설한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국제협력부(the Co-operation Ministry)를 외무부에 통합시켜야 한다.
- 우리는 현재 필요한 제반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유럽연합의 참여와 지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연대

- 인권이 위협받는 모든 곳에서 인도주의적 실천을 발전시킨다.
- 공익에 부합하는 비정부기구들(NGOs)을 지원할 것이다.
-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나라들간의 협력 기구를 강화하고 발전시킨다.
- 대외적인 문화활동을 위한 시설을 늘린다.

2. 유럽과 유럽인을 위하여

- 프랑스는 유럽건설의 전위에 서야 한다. 많은 부분을 미테랑 전(前)대통령에게 빚지고 있는 이 사업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 유럽 정치를 건설적·진보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다.
- 유럽이 효율적이고 민주적으로 발전하도록 유럽 차원의 의사결정구조를 투명하고 단순하게 만들어야 한다.
- 필요할 경우 유럽연합의 운영에 다수결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주체성을 유지하면서 유럽을 확대하자

- 공동농업정책같은 유럽 차원의 정책과 제도를 동유럽의 자유무역지대 확산시켜야 한다.
- 군사협력과 인도주의적 협력 양자를 포함하는 실질적인 공동 대외정책을 실천한다.
- 우리는 평화증진과 안전보장, 그리고 발전과 민주주의를 위해 지중해 연안국가들이 주도권을 행사할 것을 제안한다.

단일통화를 향해

- 통화안정을 위해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따라 빠른 시일안에 유럽단일통화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 우리는 단일통화제도가 수립되었을 때 안정적이고 균형적인 국제통화제도를 구축하고 변칙적인 자본운동을 억제하기 위해 전세계차원의 협상을 추진할 것을 유럽연합에 제안한다.

고용을 위해 함께 싸우자

- Jacques Delors가 백서를 통해 제시한 일자리 확대와 지속적인 발전모델을 위한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 우리는 유럽 관계장관협의회가 중앙은행에 대해 충분한 권한을 행사할 것을 요구한다.
- 유럽사회계약의 조건들을 결정하기 위해 노동조합과 사용자 대표들이 참가하는 유럽사회총회(European Social Conference)를 활용해야 한다.

문화를 위한 공동사업

국제수준의 유럽

3. 국방정책을 다시 생각한다

핵억제력을 유지하라

- 국방과 자립의 기둥으로써 핵억제력을 가져야 한다.
- 우리는 다른 열강들이 모의 핵실험만 실시할 경우 핵실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재래식·비재래식 무기의 전향적인 감축을 통해 군축을 진전시키고 핵실험을 종결하도록 핵확산금지조약을 발전시켜야 한다.

유럽방위의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협력하여 공동안정보장을 위한 유럽군을 창설한다.
- 유럽기동타격대를 창설한다.
- 유럽차원의 군수산업 출현을 위해 노력한다.
- (레이다, 적외선무기와 관련된) 유럽차원의 다자간 협력을 증진시킨다.
- 유럽차원에서 군수산업 통합을 장려한다.

국민의무를 강화하자

- 징병제를 유지한다
- 군복무기간동안 지방정부의 사회 서비스, 사회단체와 인도주의단체 혹은 해외의 인도주의적 활동에 종사하는 새로운 형태의 국민 의무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V. 새로운 실천

1. 제도를 민주화하라

- 진정한 '국민의 대통령' 을 위해 5년 임기제를 시행한다

즉각 대통령 임기를 5년으로 축소하라

정부와 의회의 기능을 복구하라

- 정부가 집단적 협의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그리고 국민과 밀접한 정부가 되기 위해 정부는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진다.
- 지방의회 의원직과 지방장관직의 겸임을 금한다.
- 수상에게 예산권을 부여한다.
- 예산안이 투표로 통과된 경우 장관들에게 더 많은 예산집행권을 부여한다.
- 국회의원직과 지방장관직의 겸임을 금한다.
- 법률제안과 공공정책 평가같은 새로운 임무를 의회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 조사위원회 구성 및 공공문제 조사와 관련해서 야당에게 더 많은 권리를 부여한다.
- 국회경제예산사무처의 신설같은 의원들이 정부와 동등한 조건에서 활동하기 위한 현대적인 수단들을 의회에 제공한다.
- 의회에 법안의 발의 및 통제 권한을 되돌려 준다.
- 회기중 위원회와 정부가 심의하는 법안 내용을 공개한다.

시민들에게 더 많은 권리를

- 일반국민이 헌법재판소(Constitutional Council)에 문의하고 조회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 대통령 임기를 5년으로 줄이고 행정부장관직과 의원직의 겸임을 금하는 것에 대해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2. 사회안전을 보장하라

- 3단계 행동을 위하여 : 보호, 설득, 억제

지방정부의 치안정책을 발전시키자

- 주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시군구의 치안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 일상적인 치안활동을 위한 인력을 늘려야 한다.
- 경찰력의 의전행사 동원을 줄인다.
- 보안경찰(DRG) 인력을 민생치안으로 전환시킨다.
- 일반경찰과 특수경찰의 업무영역을 조정한다.
- 경찰력을 현대화한다.
- 새로운 형태의 금융범죄 및 마약거래와 단호하게 싸운다.
- 보안경찰(DRG)의 협력을 받아 특수부대(DST)를 강화함으로써 테러리즘과 단호하게 싸운다.

투명성을 강화하라

- 보안경찰(DRG)을 통제한다.
- 경찰과 특수경찰의 투명성을 감독할 수상 직속의 치안감독위원회(Superior Council for internal security)를 설치한다.

3. 사법제도의 독립성을 강화하라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라

- 행정부와 의회는 형법원칙을 정해야 한다.
- 정치권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 사법부에 압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 대법관과 검찰청간의 관계를 단절시켜야 한다.
- 평화롭고 독립적인 재판과정을 위해 범죄수사국의 행위와 기능에 대한 법적 통제를 강화한다.
- 시민생활 보호를 위해 행정기관의 도청은 엄격하게 통제한다.
- 치안판사회의의 권한을 강화한다.

사법부를 현대화하라

- 우리는 사법제도의 현대화를 최우선 과제로 상정한다.
- 사법제도의 목적(신속하고 투명한 재판과정, 공개적인 법관채용, 재판소의 전국적인 설치, 공평한 제도이용, 원활한 법률구조 등)을 다시 확인한다.
- 다음 회계연도 예산에서 사법부예산을 2배로 증액한다.

4. 공공생활에 새로운 확신을 주자

부패척결

- 사법부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범법자는 반드시 처벌한다.
- 프랑스 시민의 공공생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공인에 대한 통제(공직자 재산공개 등)를 강화한다.
- 민간기업의 공직자 채용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한다.
- 금융사건 재판에 대해 법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국가서비스를 혁신하라

- 국가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공공서비스의 의미를 복원한다.
- 사회적 국가적 (특히 농촌지역에서의) 불평등을 없애기 위한 공공서비스의 역할을 바로 인식한다.
- 1988년 시작한 국가현대화 정책을 계속 추진한다.
- 모든 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규를 단순화한다.

5. 남녀평등을 실현하자

- 진정한 평등과 자유로운 선택, 집단적 진보를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일상생활을 개선하자

직업의 남녀평등을 실현하자

- 여성의 관리직 참여 증대와 동등한 임금 보장을 위해 정부와 공기업이 남녀평등을 위한 고용계약을 자발적으로 체결하도록 한다.
- 같은 내용의 계약을 민간부문에서도 공식화한다.
- 특히 여성과 밀접한 산업에서 관련 협약을 요구한다.

관리감독직에 대한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라

- 전국에 Veil법을 완전하게 적용시킨다.
- 피임과 낙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 낙태센터를 건립하고 필요한 인원과 권한을 지원한다.
- 낙태자에 대한 공격행위를 금하는 Neiertz법을 공공병원에 엄격하게 적용한다.
- 성폭력구호상담센터를 강화한다.

- 프랑스와 유럽 모두 여성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한다.

여성의 평등한 사회생활 참여를 보장하라

- 향후 5년동안 남녀평등운동을 계속 전개한다.

- 국가는 행정부의 고위직에 여성을 임명해야 하며 이를 통해 운동을 지속적으로 발전 시켜야 한다.

- 국가여성위원회(Women's States General)를 조직한다.

6. 일상생활의 시민권을 발전시키자

- 사회단체의 발전을 위해 재정을 지원한다.

- 우리는 사회단체의 역할을 인정할 것이다.

- 국가적인 프로젝트(고속철도TGV, 고속도로건설) 조사활동에 대한 정당한 법적 권리를 사회단체에 보장한다.

- 주요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사회단체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 각종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확대한다.

- Giraud 법의 엄격한 조항을 폐지하고 사회적 합의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들을 활성화한다.

시민권에 대한 공화국 전통을 재확립하라

- 프랑스 영토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들에게 프랑스 시민권을 부여하는 공화국 전통을 회복한다. ❖